

“새만금, 한국의 두바이로”

이명박 후보 ‘호남 보듬기’ 행보... “새만금계획 재검토해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7일 ‘호남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 후보 지지 성향의 호남 유권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미리 공격적 행보를 통해 호남표 단속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부안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유지사무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강제섭 대표, 이재오, 정형근, 한영 최고위원, 이방호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계자들과 ‘새만금개발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되, 대부분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이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도 서울시장을 해봤지만 시도지사들이 정치논리에 너무 몰입하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 대통령도 너무 정치논리에 빠져들면 국가발전이 저해된다”면서 “대선 때가 되면 모두 뭐든지 해주겠다고 할텐데 그러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0년까지인 새만금 개발 완료시점을 202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김완주 전북지사의 요구에 대해 “10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70%를 농토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산업·관광단지용) 30% 중에서도 70%는 습지대여서 산업용

으로 쓸 수 있는 땅은 1천만평 밖에 안 된다”면서 새만금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국제화해야 한다. 외국 자본과 외국인들도 들어와야 이 사업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약속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비서실장은 “새만금을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개발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방호 사무총장도 “이 후보는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새만금 방조제와 신시도 전망대 등 인근 시설을 시찰한 뒤 이어 지역 4개 언론사와 합동인터뷰를 갖고 “2008년 신발전체제”와 자신의 전북경제 발전 플랜 등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 새만금 발목” VS “말조심 해야”

김완주지사-李 후보 설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강제섭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7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 무산의 책임을 둘러싸고 김완주 전북지사와 대안인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북 부안 새만금 가력배수유지사무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이 후보와 강 대표 등으로부터 ‘면박’에 가까운 강한 항의를 받은 것.

김 지사는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번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한나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특별법이 폐기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성 발언도 곁들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인 김 지사가 압도적인 여론지지율을 보이는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면전에서 ‘쓴 소리’를 내뱉은 것.

그러자 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발끈했다. 6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일정상 분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일 뿐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는 것.



17일 전북 부안 새만금현장을 방문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마중 나온 김완주 전북지사를 반갑게 맞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 김 지사의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협조 발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강 대표는 “우리가 후보를 모시고 모두 이렇게 온 것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보겠다고 온 것인데 지사가 공식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법 통과가) 안 된다’, ‘이 것을 안 해주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말하면 되겠느냐”면서 “지사가

말실수를 자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도 “김 지사도 정치 논리를 벗어났다. 당 소속이 어떻게 간에 벗어나라”면서 “나도 한 마디가 귀에 거슬렸다. ‘도민들이 분노할 것’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 광주시당 내홍 확산

당협·시당위원장 선출 갈등... 당무감사 요구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양분된 광주지역 지지세력간 양극이 당협 운영위원장과 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의 당권쟁악 갈등으로 증폭되면서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광주시당 정필중 자문위원 등 20여명의 당원들은 17일 오후 1시 당사 앞에서 ‘부패규탄 광기대회’를 갖고 일부 당직자의 사퇴와 시당에 대한 당무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당협 운영위원장 선출이 당협·당규와 어긋나게 진행된 데 이어 시당 위원장 선거 조작 편법으로 치러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당협 운영위원장의 경우 대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고의 결의가 있을 경우 달리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 규정 때문에 현직 위원장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동맹들을 내세워 편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은 또 “현 안재홍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탈법을 방치하는 등 특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한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중앙당에 광주시당 및 일부 당협 운영위원회 자격문제

와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이어 특별 당무감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안재홍 현 위원장을 차기 시당위원장에 재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당초 후보로 등록했던 김정영 동구당협위원장과 안 위원장간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후보가 15일 돌연 후보 사퇴서를 제출, 단독 후보로 치러졌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당협 운영위원장 선거는 경선 유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운영위에서 선출한 것이고, 시당위원장 선거 역시 단독 후보일 경우 시당위원장을 거치지 않고 운영위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원장으로서 자격은 전적으로 중앙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최근 불거진 일부 당원들의 집단 행동은 대선 후보 경선의 후유증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는 17일 마감된 후보 등록에 박재순 현 위원장과 정양섭 전 환경·영광지구당위원장(세무사) 등 2명이 접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는 21일 오후 2시 당사 강당에서 열린다. /정식식기자 who@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있으나 마나 ‘분리발주제’



이종태
경제부 차장

광주·전남레이콘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게 지난 8월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 도시공사가 광주시 동구 중심사 집단시설지구 2단계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자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J건설과 일괄계약을 체결, 80여개 회원사들이 레미콘 납품 기회를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도 거들고 나섰다. 최근 광주시 도시공사에 “귀 기관이 실시한 입찰공고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 관련업체로부터 시정요구가 있으나 분리발주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띄웠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측은 “앞으로 주의하겠다”면서도 “공사용 자재를 분리발주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며 품질관리가 곤란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사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용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공사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분리발주를 외면하자, 지역업체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제도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와 자재를 분리해 발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을 초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분리발주를 외면하기 일쑤다. 일괄계약을 해야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고, 관련 행정도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를 했다가 사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책임회피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꺼리기도 한다.

레이콘업협 대표는 “품질관리가 곤란해 분리발주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하자 발생시 그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려는 공공기관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B업체는 “공공기관들이 법령에 있는 예외사항을 자의로 해석하고 상당수 품목을 분리발주 불이행 품목으로 분류하는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 지역중소기업의 출도산을 막아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사 발주기관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체들의 얘기다. /jtlee@kwangju.co.kr

“균형발전 배치되는 정책 거부해야”

盧대통령 ‘지역혁신박람회’ 축사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균형발전정책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잘 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의지와 자세에 달렸다”며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막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역에 계신 여러분이 개별정책이 지역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 자율화 주장과 관련, “이들은 대학 자율이지만 내용은 본고사

를 부활하고 내신반영비율을 마음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주장에는 “종부세 수입이 적은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면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삼성전자 공장 증설, 2005년 LG-필립스 공장 신축, 2006년 LG전자, 팬택 등 4개 대기업 공장 증설 등을 거론하며 “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도를 봤다”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한 뒤 “이 무슨 망발이나.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경관 지시청 거울로도 한번 살펴주세요.
www.dogday.co.kr
1588-8499 080-222-0100